

월요광장



노 경 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인구경제학자인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저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를 통해 인구 감소가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과 그 대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가 향후 50년 이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인구 감소의 ‘규모’가 아니라 ‘속도’다. 급격한 감소는 노동시장을 넘어 국가 전체의 인력 공급 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고학력 고령 인구에 주목한다. 청년 연장과 고령 인력의 신규 취업을 통해 이들을 노동시장의 새로운 주축으로 삼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기에 더해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의성과 생산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 전체 차원의 인구 및 노동시장 대응 전략으로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그러나 지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을 막을 길

방 소멸 문제, 특히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구 감소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인구정책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심화 원인을 수도권 과밀과 과도한 경쟁에서 찾는다. 조 교수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을 겪으며 살아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필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거점 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통근, 쇼핑, 관광 등을 아우르는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통해 지방의 경제적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개발 전문가인 중앙대 마강래 교수 역시 비슷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소도시에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거점 도시에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실제 그의 실증분석 결과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했을 때 인구 감소 방지 효과가 약 두 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전히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수도권 집중을 용인하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이중적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예컨대 쇠퇴하는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는 3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지방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수도권 대학 정원은 확대하는 식이다. 이러한 정책 혼선은 지방 소도시를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는 대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시적 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소도시들은 점차 행정적, 경제적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논하려면 소도시와 농촌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소도시들은 이미 남아 있는 지역 자산과 인적 자원조차 빠르게 소진하고 있으며 자생적인 대응을 하기엔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를 단순히 늘리기 위한 사업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물리적인 시설 재생이나 일시적인 활력 사업보다는 일상에서의 만족감과 지속가능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작은 도시라도 지역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구 유입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그 흐름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한 정책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방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수필의 향기



박 용 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세상을 누가 등글다고 했을까. 온통 네모인 것을, 도시의 길과 집은 네모로 모두 반듯반듯하고, 농촌 들녘도 네모로 반듯하다.

논밭밭을 길도 구불구불 골목도 나뉘어 반듯하게 퍼서 네모 세상이 되어간다. 반듯이 이어진 길을 따라 네모진 집들이 늘어서 있다. 그 속으로 들어가려면 네모진 계단을 밟고 네모난 엘리베이터를 타서 네모난 버튼을 누르고 올라간다. 네모난 현관 앞에서 다시 네모난 번초 키 위의 네모난 솟자들을 누른다. 네모난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네모난 방으로 들어 가면 거실·주방·벽·천장·텔레비전·냉장고·벽·거울·달력도 온통 네모다. 그 네모난 침대 네모난 매트리스 위에 익숙하게 올린 우리 몸, 그 몸에 쓰인 자모도 네모가 두 개나 된다. 벽에 걸린 달력도 네모, 반듯하다. 달력 안의 솟자들도 칸칸이 네모 속에 들어있다. 앞 달, 뒤 달까지 100개가 훌쩍 넘는 네모들이 모여 무슨 모임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좀 답답하다. 창으로 시선을 옮긴다. 창틀도 네모 창문도 네모 유리창도 네모다. 창을 열고 밖을 본다. 거리 가득 네모난 자동차들이 네모난 길을 가고 있다. 건축

세상 속 네모, 네모 속 네모

자재를 가득 실은 네모난 트럭엔 네모난 벽돌들 네모난 타일, 네모난 상자들이 가득 쌓여 실었다. 자랫값을 치르려고 꺼낸 지갑도 네모, 서로 주고받는 명함도 지폐도 네모다.

그뿐인가, 공공기관들도 군대 막사도 상가들도 그리고 내가 앉아 있는 도서관도 온통 네모다. 진열대도 네모, 책상과 의자도 네모, 책꽂이도 네모, 라벨도 네모, 커져이 쌓아둔 책들도 네모다. 책 속의 페이지도 네모, 글들도 한 줄로 나란히 네모, 문단과 문장도 네모, 사열하는 병사처럼 일제히 줄을 맞춰 섰다.

수많은 네모로 이루어진 원고지, 그 속에 수인처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글자들을, 이리저리 뒤집어도 주사위처럼 네모난 곳에서 흑여 어느 하나라도 벗어나면 사방에서 못매를 맞을 것처럼 한 글자 오타자 없이 글자들은 질서 정연하다. 땅과 방을 소유하는 일, 가장 효율적이며 정확한 구분이 네모였는지, 세상은 온통 네모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에는 네모가 없다. 나무, 꽃들, 수많은 이파리 어느 것 하나 생명을 가진 것들은 네모가 아니다. 수많은 물고기와 깊은 산속 다양한 동물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갖가지 새들. 파프랫 뛰는 것들과 부풀거나 줄어드는 탄력 있는 것들, 어느 하나 움직이는 것이 없다. 얼굴도 없고 손발도 없으니 웅당 심장도 없다.

그런데 왜 이리 우리 네모에 친숙한가. 네모는 왜 이토록 편리하고 평안한가. 제식 훈련하듯 하는 각진 네모를 우리 이토록 사랑하는가. 그건 어쩌면 우리 네모

와 지겹도록 함께 살면서도 어느 한순간도 네모를 떠올리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사는 동안 네모에 갇혀 산다고 생각하면 네모난 감방 안의 수인처럼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네모를 기억하지 않기때문에 그 모서리들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을 때 네모는 더는 네모가 아니다.

네모는 왜 이토록 꼼꼼꼼을 살아있을까. 어떠한 네모도 숨을 쉬지 않는다. 그래서 네모는 자신 안에 무한히 호흡하는 것들, 그 생명들을 사랑하고 담아내는지 모른다. 네모난 건물과 네모난 여러 개 방, 또 그 방에는 네모난 액자, 책상 침대 등 수많은 네모가 꼼꼼꼼을 살아간다. 성냥갑 속 성냥처럼 웅기종기 우리 네모 안에서 탈출을 꿈꾸기도 하고 때론 스스로 네모에 편안히 기대거나 네모에 갇혀 휴식을 취하며 살고 있다. 네모가 꿈틀꿈틀 움직일 때 네모는 더 이상 무생물이 아니다.

네모는 또 왜 이토록 광대하고 말랑말랑한가. 작은 데도 내 몸을 충분히 받쳐주는 네모 의자, 네모 침대, 외풍을 막아주는 네모 벽은 또 얼마나 광대하고 광활한가. 책과 책 속의 문단과 문장, 글자들도 신문지처럼 반듯반듯 네모지만 그 속의 의미, 글자의 뜻, 수많은 작가의 생각은 또 네모진 것 하나 없이 얼마나 부드럽고 유연한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뛰구는 방 또한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말랑말랑한가.

우리는 네모 속에 산다. 그러나 네모는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 네모난 집에서 네모난 길을 걸으면 서도 네모로 살지 않는다. 동글동글 동그라미를 꿈꾸며 산다. 동그라미를 품고 있는 네모, 그래서 위대하다.

시민사회가 만드는 새로운 길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불평등 심화,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이고 긴급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나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과 현안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책임과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왜’ 활동하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활동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변화를 이루내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듯 급변하는 환경에서 올해부터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시민사회 키움-변화와 성장’ (이하 ‘키움’) 사업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시민사회단체 내부의 병목현상을 극복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비단 시민사회단체가 풀어야하는 과제는 재정만이 아니다. 조직의 미션과 비전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 부족, 의사결정 구조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효율적인 홍보·소통 전략 부재 등 다층적인 요인이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키움’ 사업은 이러한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실천 역량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구성원 간의 협력 시스템을 바탕으로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 단체가 변화되고 성장하면 그 변화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혁신으로 연결된다. 시민 대안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재정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직운영이 전문화되고 효율화된 마을공동체가 내부 구성원들과 역할 재정립 및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지자체·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쌓이면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키움’ 사업은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성장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 컨설팅과 조직변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쌓이는 경험과 노하우는 장기적인 조직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문제해결 역량과 네트워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키워줄 것이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준다.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으며 시민사회가 더욱 성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사회의 핵심 역량은 ‘공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추는 능력’이다.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社說

이재명이 띄운 광주 미래비전에 기대감 UP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행보에 광주 민심이 기대감으로 부풀고 있다. 이 예비후보가 대선 출마를 전후해 광주의 현안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1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모델시티를 광주에 구축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논의가 일자 내란 종식이 우선인 만큼 개헌은 시기상조라면서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등 일부 세력이 개헌을 이슈로 이 예비후보에게 개헌 반대 프레임을 씌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단호하게 반대하면서도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데 일조한 ‘광주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약속

지난 10일 대선 출사표를 통해서는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통한 경제 성장과 ‘잘 사니즘’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립과 갈등의 원인으로 경제를 꼽으면서 경제는 민간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려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첨단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에 10조원을 투자해 AI 모델시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광주에 AI컴퓨팅센터를 유치해 AI 시범도시로 만들겠다는 이 예비후보의 대선 공약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AI 시범도시 패키지 공약으로 10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반도체 10만장 이상을 보유한 광주 AI컴퓨팅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인재 양성과 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AI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은 단연 AI다. 민선 8기 들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중심도시’를 모토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강기정 시장은 21대 대선에 반영할 핵심 과제로 AI 모델시티를 내세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는 그동안 국가 AI데이터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274개 AI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은데다 1만1362명의 AI 인재를 배출해 ‘인프라-기업-인재’로 이어지는 AI 생태계를 마련했다.

AI 모델시티 실현될까

이런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확인되면서 광주 발전이 호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AI 패권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집적’이다. 국내에서도 지자체마다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빠르게 결정해 인프라를 한 곳에 집적화 할 필요가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의 광주 AI 모델시티 지원 공약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는 AI 분야에서 이미 국내 선도시라고 할만하다. AI데이터센터 설립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인 인공지능 전환(AIX) 실증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장 이상의 GPU를 갖춘 초거대 AI컴퓨팅센터 구축이 핵심인데 이 예비후보의 공약이 이를 실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주는 1조5000억원에 불과한 민간·군공항 이전이라는 현안사업을 문재인 정부 시절 지역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체제에서도 성사시키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13조원이 투입되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지역민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광주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 민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다. 단순히 대선 승리를 위한 공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선 과정은 물론 이후에도 공약이 제대로 반영돼 광주의 미래비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개발 예정지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기 위해 미리 선점하는 행위를 ‘알박기’라고 한다. ‘황금알을 기대하며 알을 땅에 박는다’라는 의미로 주로 건물이나 토지 분쟁에 자주 등장한다. 즉 알짜배기 땅을 선점해 땅값을 예상보다 훨씬 부풀려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반대의 알박기도 있다.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에서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권에서 신종 ‘알박기’가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구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한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까지 받은 인물이다. 한 대학의 ‘알박기 인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는 지난해 말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인물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단순한 차원의 ‘알박기’를 넘어 ‘내란 종식’을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들 가슴에 ‘대못 박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예 향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61 사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